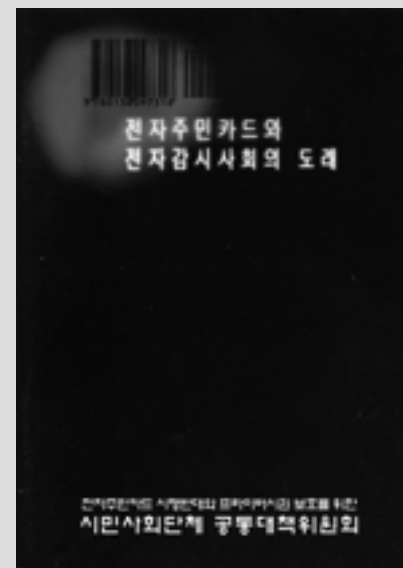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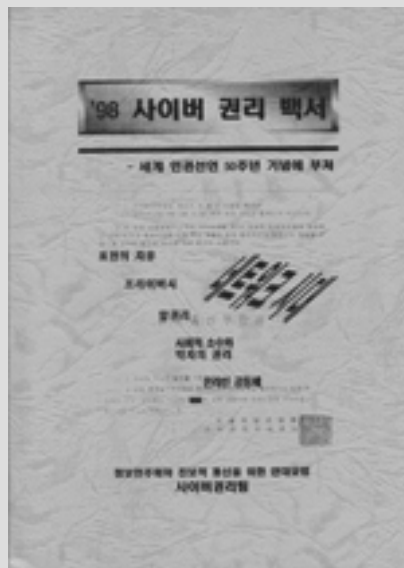


정보통신(정보인권)운동 10년

진보넷 설립 이전

- 정보연대 SING
- 통신연대
-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
- 통신검열 반대운동



초기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

-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, 1996, 1997년 『정보통신검열백서』, 1998년 『사이버권리백서』
- 2000년,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,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
- 2001년, 등급거부운동,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(2002)
- 2002년 6월 27,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위헌 판결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운동



초기 프라이버시권 운동

- 지문날인 거부운동
- 2001년 지문날인 반대연대 결성
-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(1999년 9월), 국가인권위원회 진정(2003년 6월), 2002 대선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



초기 지적재산권 반대 / 정보공유 운동

- 99년 지적재산권 연구회 ->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-> 정보공유연대 IPLeft
- BM 특허 :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(2000) -> 무효화(2002)
-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(2002년 1월)
- 소리바다,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비판,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운동



노동감시 반대운동

-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(2002년)
- 『노동자감시 대응 지침서 :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』 (2004.1)



NEIS와 정보인권 대중화

- 인권단체 단식농성 (2003.6),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
- 교육정보화위원회 합의(2003.12)
- 정보인권 담론 대중화
- 전자정부 사업에 제동,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필요성 제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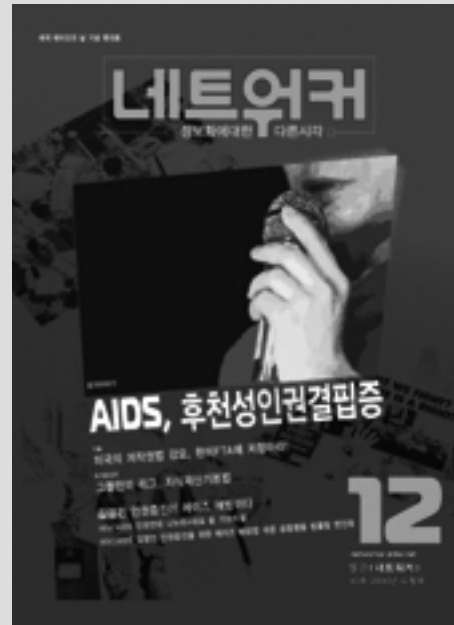
국제연대

- APC 가입 (2001.11)
-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(W SIS) (2003)
-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Ver 1.0 (2003.6)



월간 <네트워커> 발행

- 2003.7~2006.12 총 40호
- 이후 정보운동 포털, 계간지 <액트온>



실명제 반대 등 표현의 자유 운동

- 2003년부터 실명제 입법화 시도
- 선거시기 실명제 통과 (2004.3),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
- 2005년 5.31 지방선거 실명제 반대 캠페인
- 실명제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통과 (2006.12)
- 2007 대선 2008년 5.31 총선,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, 민중 언론 참세상에 과태료 부과
- 2008년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 : 실명제 확대, 사이버모욕죄, 정보통신망법 개정안
-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입법 운동



프라이버시 보호운동

-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운동 : 17대 국회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
- 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
- 목적별신분등록제 도입 운동 : 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' 통과(2006)
- 통신비밀보호운동 :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엄격화(2005.5), 모바일/인터넷 감청 및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에 대한 대응(2007~)



프라이버시 보호운동(2)

- CCTV 대응 : 2007년 12월 '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'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
-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대응 : 미아 유전자 DB(2005), 범죄자 유전자 DB(2006), 생체여권(2007~) 대응
- 2005 빅브라더상 행사



지적재산권 강화 비판 및 정보공유운동

- 저작권법 개정 비판 : 2001년 디지털 도서관, 2005년 전송권, 전문개정안, 2008 삼진아웃제
- 공정이용 확대법안 발의(2005)
-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운동 (2004~2005)
-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(2006~)
- 정보공유라이선스(2004.2005), 열린문서 캠페인
- 푸제온 강제실시 논의 (2008)



미디어 융합 대응

- 자유권 중심 운동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개입, 미디어 공공성을 주장하는 운동으로.
- 방통융합 세미나(2005~)
- 2008년 미디어행동 결함



평가

- 이슈 파이팅 중심의 활동, 정보통신(정보인권) 의제에 대한 재정리 필요
- 법제 대응이나 전문적 활동 중심, 대중적 활동의 미흡
- 활동가 및 이슈 네트워크 재생산의 문제